



‘지지부진’ 중문골프장 매각 논의 본격

오영훈 지사 최근 한국관광공사 방문해 협의 진행 공사, 2025년까지 협상후 결렬시 민간 매각 언급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가 중문골프장 매각 협상을 추진하면서 1970년대 토지 강제 수용조치로 조성된 중문골프장이 제주 사회로의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 매각 내용이 담겼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주민반발 등 지역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기획재정부에 민간 매각보다는 제주도를

우선 협상할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최근 제주도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것을 승인하면서 중문골프장 매각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는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기획재정부의 경영혁신 가이드라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매각 협의 등에서도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까지 중문골프장 매각을 진행할 계획으로 제주도와는 2025년까지 협상을 이

어갈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문골프장 매각 협상의 주요 포인트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다.

중문골프장은 95만4767㎡여 규모로 앞서 제주도는 2011년에도 한국관광공사에 이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에서 매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도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8월과 12월, 이듬해 5월 등 3차례 걸쳐 민간 매각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응찰업체 수가 미달하거나 응찰업체의 자격 미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재 공시지가 등 시

세를 고려하면 감정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970년대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CC를 조성했다. 이에 지역주민 등 도내사회에서는 강제 매입된 만큼 감정평가 기준의 매각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거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거래절차를 위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제주도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게 되고, 이후 양 기관이 실무협의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등 청취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도의회 환도위, 하수처리장 현장 대화 26일까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민대표 간담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마을회장, 리장, 어촌계장 등)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2일에는 제주·서부(판포)·대정, 23일에는 동부(월정), 색달을 방문했고 25일과 26일에는 남원·보목, 성산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처리장 소재 지

역 의원은 물론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해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증설에 대한 진행상황과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지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현장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깊이 실감한다”면서 “특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특별법 7단계 개정안 법안소위 의결 불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7단계 개정안은 도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부처 협의와 함께 제주지위위 심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

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지난 2월 22일과 4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결을 보류했고,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청신호’

국회 행정안전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어제 의결 주민투표 통한 시·군 설치 근거 마련 내용 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단층제 체제를 고려해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 충돌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

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안 원안에 담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선도적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뒤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없애고 2개 행정시를 뒀다.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아쉬운 발사 연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된 24일 오후 발사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전남 고흥군 동일면 봉남동대를 찾은 한 시민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청정 임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서귀포시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 생산농가 물류비 지원을 통한 임업 및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농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정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서귀포시 소재 농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 대상품목 : 표고버섯, 고사리, 취나물, 산양삼, 도라지 등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임산물 품목중 더덕을 제외한 식용가능 임산물
- 지원기준 : 도외 물류비 60% 정액 지원 (2023.3.25.이후 사용분) 조합원 또는 계통출하자 : 1입가당 / 1,500천원 한도 지원 이 외 생산자 : 1입가당 / 1,0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절차 : 지원서 작성 신청 => 도외출하 => 도외출하 확인서류 (운송장 및 계통출하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정산신청 => 출하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2일(월) ~ 6월 2일(금) ※신청자가 많을 시 기구당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신청서는 서귀포시산림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주 소 : 서귀포시 중앙동로 8462-2 3층 기술지도과 · FAX 064-766-4599 · e-mail 주소 : nambu4544@hanmail.net
- 접수 후 담당자에게 확인전화(064-792-8544) 필수

문의처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산림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산림조합 (064-792-8544)

sj 서귀포시산림조합

2023년도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 컨설팅사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비용 전액 무료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 ~ 2023년 6월 23일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업장

신청방법 제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jef.or.kr)에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컨설팅신청 분야

인사·노무분야 (노무사)	세무·회계분야 (세무사)	법률분야 (변호사)
·노동관계 법령상 위법성 진단 및 개선	·세법 및 관련기준, 지침 등에 대한 위법 해소 상담	·기업운영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법령해석 등 제공
·근로시간 분석에 따른 근무형태 조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조세 관련 세무 이슈 상담	·신청기업의 법률자문 요청에 따른 상담등 법률서비스 자문

문의 Tel 064.751-2205-7 / Fax 064.751-2208 / 이메일 jefnomu@jef.or.kr

제주경영자총협회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제주 바다는 제주의 미래입니다.

제주 바다가 환경오염과 해양쓰레기, 해양자원의 고갈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오염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 푸른바다,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제주특별 (사)제주특별자치도전복협회
회장 오 동 진 외 회원 일동